

‘자동차 황금번호’ 빼돌린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광주 서구 직원들-대형업체 결탁 3년 350건 배정 고급 외제차·범인 다수...“수사 의뢰·시스템 개선”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수년간 업체와 결탁해 자동차 등록번호 배당 시스템을 조작,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올해 초 지방세 환급금 횡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조직적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17일 자동차 등록번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번호가 부적절하게 배정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감사담당관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 2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들의 조직적 번호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차량 판매업자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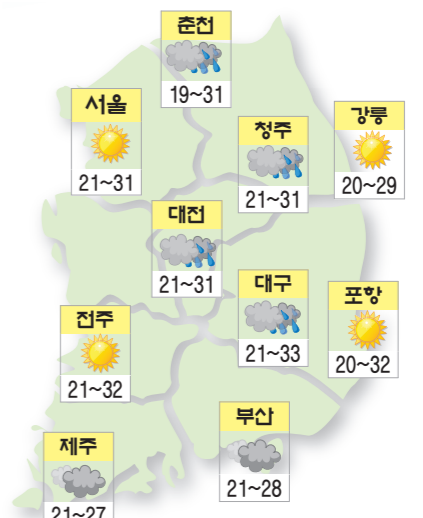
록 대행업체의 요청을 받아 ‘5555’, ‘7777’, ‘9999’, ‘1004’, ‘9111’ 등 선호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대형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민원인 차량에 선호번호를 임시 등록한 뒤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자동차 등록사항에 착오·누락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한 후, 전산시스템의 무작위 추첨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번호를 직접 입력해 원하는 차량에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사례는 약

350건에 달했으며, 번호가 배정된 차량 상당수는 고가 수입차와 범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직원은 10명이다. 서구는 이중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은 훈계·주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 중 3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가 의결됐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고 자동차 등록 시스템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드러난 지방세 환급금 횡령 사건과 맞물리며 파장을 키

우고 있다. 당시 환급 업무 담당 공무원은 환급금 지급 권한을 악용해 328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시민단체는 “자동차 번호판 배정은 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잇따른 비위가 드러난 만큼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문화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규 서구 감사담당관은 “업무 특성상 실시간 통제에 한계가 있었지만 관리·감독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18	달림	08:27
맑음	19:49	달림	22:50



광주	구름	21~32
목포	구름	21~29
여수	구름	21~28
순천	구름	21~29
구례	구름	20~31
광주	맑음	21~30
신도	구름	21~28
흑산도	구름	20~25
진남	고풍	21~29
진도	구름	21~28

목포	미물(고)	04:40 / 16:35
	샘물(저)	09:48 / 21:47
여수	미물(고)	11:21 / --:--
	샘물(저)	05:19 / 17:22

‘청부살인 미수·해외 도피’ 50대 징역 7년

살인 청부 범행에 가담한 뒤 18년간 해외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인터넷 적색수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청부살인 대가를 약속받고 전남 목포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2007년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청부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같은 해 8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된 공범 4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3명은 검거돼 징역 4~15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살인 범행에 가담해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과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자활기업 제품 살펴보는 시민들 17일 오후 광주 북구 더드림세움장터에서 열린 ‘소소마켓’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활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9월 2일 시행

평가원 “EBS 간접 연계율 50% 수준 유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마지막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9월 2일 시행된다. 평가원은 17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학습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 역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어·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은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재학생은 무료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성적 통지표는 9월 29일 배부된다. 연합뉴스

211명 속여 105억 가로챈 비상장주식 사기단 실형

사칭 계좌·대포폰 사용...대분·가명으로 업무 분담도 피해자들 주책임대차 보증금·노후 자금 잃어 ‘속앓이’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범 2명에 게도 징역 1년~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1500만~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총 105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공범들도 같은 기간 투자자를 모집해 각각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판매 총괄과 팀장 역할 등을 나눠 맡고 투자 권유용 대본과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반려동물 관련 자가 검사카드 개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350~6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투

자금 입금 계좌도 실제 기업과 무관한 사칭 계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상선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넘겨받아 공범들에게 공급하고 범행에 필요한 연락처 등을 제공했으며, B씨 등은 투자자 모집과 범죄수익의 정산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주택 임대차보증금과 노후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상당수 피해자는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가족 갈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배부

마넨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고등학생들의 교실을 찾아가 특정 후보를 알리는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거 관련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이후 9개 교실에 들어가 인쇄물이 제대로 배부됐는지 일일이 확인했으며, 학교에 일찍 등교한 학생들에게 인쇄물 배부를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워 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경찰 수사 본격화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여부와 함께 5·18 특별법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양중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공범 3단

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주 남부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의 경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팀과 전략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재 라인에 대한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과 교차 조사를 실시했지만 고의성

신세계 감사팀장 참고인조사...5·18특별법 적용 검토 박종철 열사·유족 명예훼손도...모욕혐의는 입증 난망

을 입증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획 담당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경찰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전자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욕 혐의 역시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만큼 입증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특히 논란이 된 이벤트 문구인 ‘책상에 탁! 탱크데이!가 고(故) 박종철 열사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

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1일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법리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오는 22일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